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97 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서영교·조인철·황정아

박지혜・김준형・이수진

이해식 • 한정애 • 조계원
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,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(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, 대전, 인 천)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.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.

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, 각 지역의 위 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(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국가"를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"로, "한다"를 "하고,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의료지원) ① <u>국가</u> 는 독립	제17조(의료지원) ① <u>국가와 지방</u>
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	<u> 자치단체</u>
대하여 의료지원을 <u>한다</u> .	
	<u>하고, 이 경우 각 지역별</u>
	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
	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	3
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	
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<u>o</u>]
<후단 신설>	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,
	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
	도록 위탁하여야 한다.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